

## 송진우의 건국사상- 기독교사적 접근

김명구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교수)

### 1. 서언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에는 두 가지 큰 과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어떤 세력이 일본의 대체 지도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떠한 체제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를 둘러싼 각 그룹은 치열하게 경쟁했다. 북한의 경우, 이미 소련에 의해, 공산주의체제가 들어서고 확정되고 있었던 반면, 남한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 계파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군정 영향아래, 남한의 체제도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곧 영미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계도 예외 없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남한과 북한 교회 지도자들의 일부도 정치활동에 깊이 개입했으며,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기독교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고 정치계에 투신하기도 했다. 각종 강연 설교 또는 글을 통해 정부수립 방향을 모색했고 각종 정당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교세의 한계도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기독교계 인사들이 만든 정당들은 급속히 힘을 잃었고, 이에 정치에 참여하려 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각 정당으로 흡수되어 자신들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

한국기독교계의 정치적 이상과 역사성과 일치하는 대표적 정당 중 하나가 한민당이었다. 한민당 내부에 미션계 학교에서 교육 받았던 민족지도자들이 많았고, 한민당이 채택한 정강이 기독교계가 주장했던 건국적 과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민당은 흥사단과 함께, 기독교계가 표방하던 민주주의 방식을 실현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던, 그리고 미군정과의 원활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전선과 좌우합작을 내세우며 기치를 들었던,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지만, 이 그룹의 주장은, 기독교계가 원했던 광복의 과제들과 일정한 간극이 있었다.

한민당이 합동 발기회를 할 때,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그는 중경(重慶)임시정부의 귀국 전에는 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병로와 백관수, 한민당 사무국장 나용균 등이 이를 설득했고, 결국 김성수와 송진우 등은 건국준비위원회의 ‘인민공화국’선포에 대항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sup>1)</sup> 그리고 송진우는 한민당의 실제적 당수로 추대되었다. 세계적 조류에 대해 남다른 이해와 판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민당이 채택한 강령들은 송진우의 정치적 이상, 적극적 지지와 동의 아래 만들어진 것이지만, 미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해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이미 그는 태평양 세력인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신탁통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세계의 조류와 국제적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묘했던 것은, 송진우가 일방적으로 미국식 체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진우는 당시 해방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분법적 사고 의식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다. 보다 세밀한 접근과 치밀한 접근으로 한국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 했던 반면, 그를 암살한 조직은 그러한 그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외면했던 것이다.

당시 송진우는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김구와 부딪쳤다. 그런데 김구 그룹은, 정치권력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아래, ‘민족’ 우선을 내걸었다. 지금 한국 사회 한쪽에서 내걸고 있고, 민족지상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민족’이 우선이 될 때, 이데올로기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김구계에서는 어떤 체제의 국가 형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구상이 엿보이지 않고, 당시 북한이 채택하고 있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반면, 송진우에게 우선 목표는 ‘국가건설론’, 곧 건국론이었다. 이상적 국가 건설이 그의 최우선 지향 목표였던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떤 국가 형태를 지향할 것 인가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된다.

송진우는 한민당의 초대총무로 실질적인 당수였고, 남다른 혜안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국제역학관계에 대해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고, 이상적인 건국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사상의 한민당의 지향점과 실천이 되었다. 한민당의 족적 속에서 송진우의 사상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소고는 송진우의 건국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고에서는 송진우의 국가사상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밝히고자 한다.

## 2.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관계

---

1) 동아일보 1971년 11월 30일자, 허정, op.cit., pp.101-102. 주변의 설득에 따라 송진우는 수석총무직을 수락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미군은 한국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상태로 입국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여서 9월 20일경까지 한국의 치안을 일본 경찰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1945년 9월 11일에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를 파면하고 17일에는 국장급에 미군들을 임명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송진우 등 11명을 미군정장관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 한국인 고문들로 인해 미군들은 더 이상 일본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한독당, 곧 김구가 이끌던 중경임시정부 그룹은 1945년 말, 신탁통치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국민들의 반탁열기를 이용해 미군정을 마비시키고 군정을 접수한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들은 '임정'의 내무부장 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군정 산하의 한국인 직원을 '임정'의 지휘 아래 둘 것을 요구했다. 정부 수립의 법적인 정통성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미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었다. 대개 일반 정당들도 미군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른 정파와 달리 미군정에 대한 한민당의 태도는 달랐다. 9월 6일의 한민당 발기인 총회에서 “우리 조선의 자주독립은 일본의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의한 국제적 조건”<sup>2)</sup>으로 인식하고 “미·소·영·중(美蘇英中) 4국의 공동 관리의 군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주독립 정부가 되도록 지지육성(支持育成)”해 줄 것을 호소했다.<sup>3)</sup> 또한 좌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행정 기타의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니 미국의 군정이 일정한 기간 조선에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4)</sup> 그것은 군정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체(政體)와 근대 독립국가의 실현과 정착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당국도 한민당을 “교양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sup>5)</sup> 정당이라 여겼다. “영어에 능통하고 민주정치이론에 밝은 인사들”<sup>6)</sup>이었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어서 이들을 신뢰했다. 사실, 해방 직후, 한국이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국제관계에 달려 있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정부가 한국 상황에 늘 우호적이거나 한국 최대의 호혜국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지지했고, 따라서 일본의 한국강점에 일조했던 것은 오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조공국 내지 속국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았고, 러시아도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 일본과 각축을 벌였다. 또한 일본의 침략은 한국 역사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역사적

2) 한국민주당선전부, 『한국민주당소사』(서울:동당, 1948), p.9.

3) Ibid., pp.9-10.

4) 「해방일보」, 1945년 10월 8일자.

5)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 VI(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5), p.1062. 심지연, 『韓民主黨研究 I』(서울:풀빛, 1982), p.76에서 재인용.

6) Sung Soo Kim, "Letter to General Dwight D. Eisenhower," 1946년 5월 16일자. Ibid., p.78에서 재인용.

신뢰가 있다.

1882년에 미국은 중주국을 자처했던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한국을 독립국으로 하여 한미수호조약을 맺었다. 1884년에 입국한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은 갑신정변 때에 중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의 생명을 구했다. 1905년의 을사늑약을 저지하기 위해 알렌과 헐버트(Homer Bezalee Hulbert)는 미국정부와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의 근대화의 일각을 담당해 주었던 나라도 미국이다. 이승만과 안창호가 독립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였던 나라도 미국이다. 대중교인 신규식이 상해 시절, 미국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했던 것도 미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민당 내부에는 미국의 이러한 역사적·민족적 공헌과 그 영향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민당은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기대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민당이 일부의 비판처럼 사대주의적 의식에서 미국을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에 대한 협조는 오로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정책을 위한 것이었다.<sup>8)</sup> 완전한 통일 민족 독립국가의 건설과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정치적 목표로 했고 그런 이유에서 미국무성의 극동국장인 빈센트(John Carter Vincent)가 신탁 통치가 더 필요하다고 발언했을 때,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균형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식 아래 미군정의 실체를 인정했을 뿐 군정 그 자체와 일방적인 신탁통치에는 부정적이었다.

### 3. 민주주의 사상

여운형은 송진우가 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거절했을 때, 1945년 8월 25일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 건준은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민주주의적 체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기관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에는 비민주주의적 반동세력에 대한 대중적 투쟁

7) 을사늑약 후,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식민지 수탈계획의 일환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모든 구조가 일본의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장악하지 못한 분야가 있었다. 바로 교육 부분이었다. 이미 미국선교사들은 학교와 교회, YMCA를 통해 한국인들을 의식화시키고 있었고 새로운 도덕력을 갖춘 근대 지도그룹을 육성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 민족의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한 것이 사실이었다.

8) 심지연, 『韓國民主黨研究 I』, p.72.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한국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공산당 유화책을 펴자 장덕수는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민당은 미군정 당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립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을 인정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반공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과거에 그들은 적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적 범죄를 범하였고 금후에도 그들은 해방 조선을 그 건설도중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나니 이러한 반동세력, 즉 비민주주의적 세력과 싸워 이것을 극복배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sup>9)</sup>

여운형은 송진우 등의 기호계를 향해 친일세력이며 비민주주의적 반동세력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 민족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고 우익을 대표했던 송진우를 비롯한 기호계 민족주의계와의 치열한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그는 송진우계가 친일의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민주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그때 여운형은 “민주주의는 인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해방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무계급 사회를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sup>10)</sup> 그는 민주주의를, 노동자들을 위한, 완전히 평등한, 곧 사회주의적 이상을 민주주의로 여기고 있었다.

해방 공간에서 한민당은 영미식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건준을 탈퇴하고 한민당에 입당한 김준현은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좌익계열에서는 공산주의적 독재를 의미하게 되나,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의미로 해석하고 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자유를 기초로 하는 것”<sup>11)</sup>이라 주장했다. 그는 한민당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음을 확인했던 것이다.

한민당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확고히 정립한 인물 중 한 사람이 장덕수였다. 이미 그는 1920년 4월 1일에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을 때 동아일보의 창립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선포했고, 1920년 8월에 미국 의원단이 방한했을 때부터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이며, 한국을 도와 민주주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sup>12)</sup> 더욱이 13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였고, 콜롬비아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동안 영국에서 체류하며 영국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미국과 영국사회, 영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체제에 대해 장덕수만큼 파악하고 있던 인물도 드물었다.

그런데, 장덕수를 발탁한 인물이 송진우였다. 그는 만 26세의 장덕수를 동아일보 초대 주간으로 발탁했고, 동아일보의가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20년 4월 1일 장덕수가, 창간사 “주지를 선명하노라”을 통해, 동아일보를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이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문화주의를 제창한다고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송진우가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9)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1, 송건호전집 1 (서울:한길사, 2002), pp.76-77.

10) 「해방일보」, 1945년 12월 9일자.

11) “한민당정견발표방송”, 「동아일보」, 1945년 12월 22일자, 23일자.

12) 「동아일보」, 1920년 8월 24일자.

그런데 이 시기부터 송진우의 사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3.1운동 이전, 송진우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아래 있었다. 그가 실력양성을 부르짖은 것은 그와 같은 사상 아래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나온 이후, 그러한 사회진화론을 극복했고, 민주주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25년,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만난 이후, 영미가 채택하고 있던 민주주의 사상을 보다 확고히 했다. 송진우는 1925년 8월28일에서부터 9월6일까지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구미의 자유정신과 과학문명을 애호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국을 도탈하고 인혈을 흡취하는 수성만행은 어디까지든지 배척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수성만습을 그대로 긍정한다면 인류사회는 결국에 강도의 발호에 불감할 것이며, 평화의 제단은 필경은 목축의 유린에 불과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적 정의와 인도적 평화의 유지발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든지 민족적 의혈을 불사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적 동원을 행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설령 일본을 배척한다 하면 일본의 군벌일파의 침략적 군국주의를 배척하는 바이며, 또한 적로를 친근한다 하면 적로의 평등의 정신을 애호하는 바가 아닌가.<sup>13)</sup>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해야 될 핵심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필연적 세계의 조류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구 제국들이 식민지를 늘려갔던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세계성을 가지려면 인간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평등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배척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불세비키일지라도 그 평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였다. 이때 송진우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위해 민족적 저항도 불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정치를 비롯한 당시의 정치철학, 곧 불평등적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이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 의식과 맞물려 있다. 동시에 윌슨(Woodrow Wilson)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sup>14)</sup>

이후 송진우는 일관되게 영미식 민주주의의 수용을 강력히 피력하며 “모든 국민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확실한 권리 체계를 창조하고 유지해야 할 것”<sup>15)</sup>을 주장했다.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의지는 한민당 신념과 주장이 되었고 강령으로 나타났다.

13)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10), 「동아일보」, 1925년 9월6일자.

14) Ibid.,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6), 1925년 9월 2일자 참조.

15) 白菱, “東亞日報社長 宋鎮禹氏 面影” 『彗星』1931년 3월, p.111. 심지연, “우익정당의 정치체제 구상과 실현과정”, p.130에서 재인용.

9월 8일의 한민당 발기인 대회에서는 여운형과 박헌영의 인공(人共)타도와 중경의 임정(臨政)지지를 선언했다. 여기에서 대중 본위의 민주주의 체도에 기초한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가 수립과 ‘전 국민의 자유로운 안전 보장’ 등을 선언했다. 그리고 입헌정체와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 등 영미식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sup>16)</sup> 송진우는 장차 수립하게 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던 것이다.

#### 4. 반공사상

1925년 송진우는 미국과 소련이 충돌할 것이고 이후의 냉전시대가 전개될 것을 예고했다. 미국에 의해 세계가 주도될 것이라는 것도 예고했다.<sup>17)</sup> 그때 그는 소련 공산주의가 미국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술한대로, 한민당의 창당은 송진우가 건국준비위원회와 속칭 ‘인민공화국’을 거부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여운형의 조직이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창당 이전부터 공산당과의 투쟁에 있어서 선봉적 역할을 한, 송진우를 비롯한 한민당계는 이후로도 한국독립당, 독립촉성회와 연대하여 조선공산당, 남조선로동당 등 좌파에 대한 강경한 투쟁을 지향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전략적 이유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계와 민족주의계는, 1920년대 이후 공산주의와의 직접적 조우를 통해 그 실체를 경험을 하게 된다. 조직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한국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했고 민족주의자들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공격은 동아일보로부터 시작되었다.

1922년 1월 7일 「동아일보」는 “종교가(宗教家)여 가도(街道)에 출(出)하라”는 논설을 내보냈다. 예수의 사역이 소외된 계급과 계층에 있었음을 환기시키며, 교회가 찬송과 기도, 교회 예식에만 몰두한다고 비판을 했다. 덧붙여 사회의 불의(不義)와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 거리로 나서라고 촉구했다.<sup>18)</sup> 기독교가 시대적 요구와 민족적·사회적 역할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는 주장이었다.<sup>19)</sup> 1925년 이후, 「동아일보」는 “조선의 종교가 미신과 허위로써 무지한 민중을 농락”한다며<sup>20)</sup> 반기독교운동을 두둔하고 나섰다. 연이어 동대문 부인병원(현 이화여자대학교

16) 남시욱, 『한국보수세력연수』(서울:청미디어, 2011), p.211.

17) 「동아일보」, 1925년 9월 4일자.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8)

18) 「동아일보」, 1922년 1월 7일자.

19) 宇光, “현대의 조선과 종교(二장)”, 『學之光』, 1921년 6월호, pp.43-44, 「동아일보」, 1922년 9월 16일자 참조.

20) 「동아일보」, 1926년 1월 7일자. “조선의 종교가 미신과 허위로써 무지한 민중을 농락하는 , 따라서 과학사상의 보급할 길을 말고, 허황한 곳에다가 사람의 귀중한 노력을 소비케하는 것은 엄폐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부속병원)의 한국인 간호사 홍모씨의 자살사건을 들추면서, 그 책임을 병원 운영자에게 돌렸다. 서양인 기독교인이 한국기독교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서양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생명을 천시 여긴다는 기사가 나왔다.<sup>21)</sup>

당시 언론계에는 적지 않은 공산사회주의 기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의 영업부장 홍준식이 화요회계열의 공산사회주의자였다.<sup>22)</sup> 박헌영(朴憲永), 김단야(金丹冶), 임원근(林元根), 북풍회(北風會)의 서범석(徐範錫), 손영극(孫永極), 화요회(火曜會)의 홍명희(洪命熹), 홍진유(洪眞裕), 조규수(趙奎洙), 조봉암(曹奉岩), 신인동맹회(新人同盟會)의 신일용(辛日鎔), 꼬르뷰로(高麗局) 국내부의 김재봉(金在鳳), 홍남표(洪南杓), 강달영(姜達永), 푸락치 조직의 배성룡(裴成龍), 조선노동공제회의 서승효(徐承孝), 서울 콩그룹의 양명(梁明), 조선청년총동맹의 이길용(李吉用), 조선공산당 일본연락부의 이석(李奭), 북성회(北星會)의 이여성(李如星), 동우회(同友會)의 이익상(李益相), ML당 사건의 김준연(金俊淵) 등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개벽』 등에서 활동했다.<sup>23)</sup>

공산사회주의가 나타났을 때, 한국의 지식사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들 젊은 지식인들이 민족해방을 표방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일반의 지적 빈곤을 지적했던 한국 지성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등장한 지식그룹이 반가울 수 있었다. YMCA나 YWCA 등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펼치던 인물들도 공산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sup>24)</sup> 따라서 공산사회주의계 기자들의 이러한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송진우를 비롯한 민족주의계의 반응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은 민족주의계로 확대되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 때에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이 곧 계급해방이고 정치해방이 곧 경제해방”이며 “제국주의는 곧 자본주의”라 주장했다<sup>25)</sup> 그리고 한국의 민족자본을 형성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소통을 독립의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던 민족주의계를 일본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공격했다. 또한 당시 양대 민족주의 그룹의 숙원, 곧 동아일보계와 흥업구락부계가 추진하였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타도를 외치며 투쟁했다.<sup>26)</sup> 대학보다는 차라리 대중교육의 보편화에 힘써야 한다며

21)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자.

22) 강동진, “일제하 한국 사회운동사 연구,” 학술지 (건국대) vol. 11(1978), pp. 109-111. 홍준식은 동아일보 영업국장 출신으로 화요회계열의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1921년 1월 27일에 창립된 좌익 지식인들의 사회주의 씨클인 ‘서울청년회’에 가담했던 인물로서 1923년 7월에는 ‘신사상 연구회’에, 1924년 11월 19일에는 ‘신사상 연구회’가 개칭한 ‘화요회’에 가입했다.

23) 유재천, “일제하 한국신문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제9집, p. 232.

24) 『윤치호 일기』, 1925년 10월 25일자 참조, 신흥우, “基督敎人及事 非基督敎人의 反基督敎運動觀 實 ; 事實인즉 우리도 考慮中에 있습니다”, 「反基督敎運動에 關하여」, 『개벽』, 1925년 11월호, pp.71-72.

25)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1, 1932년, pp.52-53.

26) 김준엽, 김창순, 『韓國共產主義運動史』2(서울:청계연구소출판국,1989), p. 14, p. 127.



대학설립을 방해했다.<sup>27)</sup>

1924년 1월 2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사설 “민족적 경륜”으로 인해 민족주의 그룹이 비타협적 좌파와 타협적 우파로 분화(分化)되었을 때, 이를 빌미로 공산주의계는 동아일보계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족적 경륜”이 발표된 직후인 1월 중순에 천도교의 최 린, 이종린, 동아일보의 송진우, 김성수, 최원순, 후일 조선일보계의 중심이 되는 신석우(申錫雨), 안재홍(安在鴻), 변호사 박승빈(朴勝彬)과 이승훈(李昇薰), 서상일(徐相日), 조만식(曹晩植) 등 16~17명이 회합을 갖는 자리에서 자치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정회(研政會)’의 결성을 협의했다. 그러나 신석우나 안재홍, 이종린 등은 민족의 협동을 위한 단체의 결성에 관심은 가졌지만 자치운동에는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연정회(研政會)의 결성은 실패로 끝났다.<sup>28)</sup> 공산주의계는 동아일보계가 조선총독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과 ‘타협적 민족운동’ 반대에 대한 결의를 했다.<sup>29)</sup> 그리고 동아일보계가 친일적 계보라고 매도했다.

공산주의계는 동아일보계가 주도했던 연정회를 반대했고,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김윤식 사회장’도 반대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했다. 또한 민족자치론을 빙자로 친일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민립대학부터 시작하였던 동아일보 주도의 사업에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던 일로 인해 동아일보계의 대(對) 공산주의 인식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다.

1930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병로가 선출되면서 공산주의계는 신간회가 사명과 역할,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해소론을 주장했다. 1930년 12월 6일에 있는 신간회 부산지회 대회에서 임시 서기를 맡은 김봉한은 “현재의 신간회는 소브르주아적 정치운동의 집단으로서 하등의 적극적 투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한 민족적 단일당이란 미명아래 도리어 노동대중의 투쟁욕을 말살시키고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신간회 해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sup>30)</sup> 이에 동조하며 각 지회의 공산주의계들은 신간회가 봉건적 부르주아 단체이므로 신속히 해체하고 민족혁명, 무산계급 해방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해소주장을 폈다. 그런데 여기에는 코민테른의 외곽조직 중 하나인 프로핀테른(International Professional'nykh Soyuzov, 국제 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이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 곧 일명 ‘9월 테제’를 통해 신간회가 민족개량주의 단체라는 엄격히 비판과 전달이 있었다. 또한 1928년 12월, 코민테른 제6대회의 결정서, 일명 ‘12월 테제’에서 조선공산당의 재조직에 관한 결정서 채택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sup>31)</sup> 결국 신간회는 자진 해소되고 말았다.

27) 이강(李江), “조선청년운동의 사적(史的) 고찰.”(中) 『현대평론』(1927. 10), pp. 20-21.

28) 윤종일, 『1920년대 민족협동전선연구』(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p. 35.

29)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자.

30) 「동아일보」, 1930년 12월 18일자.

신간회 활동에 적극적 경험을 갖고 있던 조병옥은 1946년의 ‘대구 폭동’을 예를 들며, 공산주의자들을 향해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맹비난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사리와 판단력이 박약한 청소년층과 친진무지한 노동자 농민을 선동과 모략을 동원하여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다는 비판도 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일당독재와 계급독재로 민주주의 말살하고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주의 세계의 건설을 위해 공산주의 세계를 깨뜨려야 하고, 공산주의와 어떠한 타협이나 합작이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sup>32)</sup> 건준과 인공을 타도하고 공산주의자와 대결하는 것이 한민당의 목표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sup>33)</sup>

송진우 등이 공산주의를 거부한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장안과 공산주의자인 정백(鄭伯) 등을 내세웠던 건준이나 박헌영(朴憲永) 등 조선공산당이 합한 인공을 거부했다.<sup>34)</sup> 공산주의계가 내세우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 5. 경제민주주의

과거에 있어서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방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민주주의가 독재적전형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재하는데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띤 중요산업은 국영화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요 또한 토지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방법을 단연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소유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분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점병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권보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sup>35)</sup>

31) ‘12월 태제’에서는 조선혁명이 제국주의 타도와 토지혁명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일본제국주의와 결합이 되어 있어,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아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적 독재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2) 조병옥, op.cit., pp.5-45.

33) Ibid., p.144.

34) 윤보선에 앞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장택상(張澤相)도 여운형이나 조봉암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준 측에서 접촉해 올 것을 계기로 한민당에 가담했다.

35) 「동아일보」 1945년 12월 23일자.

1945년 송진우는 한민당 정견발표 방송을 통해 이렇게 피력했다. 그때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에도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sup>36)</sup>며 경제민주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공평한 경제 분배를 주장한 것이다.<sup>37)</sup>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근로 대중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일방적인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거절했던 것이다.

전술한대로 송진우는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해야 될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아니라 경제적 영역까지 확장하고 제창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그가 갖고 있었던 실력양성에 대한 주장**, 곧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 대한 파기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1920년대 중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일명 ‘자치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동아일보는 독립을 위해 일단 자치권부터 먼저 확보하자고 했고<sup>38)</sup> 또 다른 한 쪽은 그것이 일본에 타협하는 것이라는 비판했다.<sup>39)</sup> 여기에 윤치호와 안창호의 밀접성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김성수의 동아일보가 수양동우회를 주도한 이광수를 영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산계와 연합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호계를 대표하고 있던 동아일보계가 서북의 안창호계의 ‘민족개량주의적 독립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생존경쟁”,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적 정치철학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진화론의 세계관을 거부한 사상이었다. 기독교계, 특히 YMCA의 흥업구락부계가 미국 신학을 바탕으로 이를 주창했고 조선일보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상당수가 이를 따르던 이론이었다.<sup>40)</sup>

1920년 4월 1일에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을 때, 만 26세의 장덕수가 초대 주간에 발탁되었다. 그는 창간사인 “주지를 선명하노라” 제목을 통해, 동아일보가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이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문화주의를 제창한다고 밝혔다. 이때 그는 민주주의를 경제적 영역과 노동의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1)</sup> 이러한 주장과 지적에 결국 송진우는 공감했고, 1925년 이후 자신의 경제사상으로 확정지었다.

36) 송진우, “전민족의 균등한 발전” 『革進』創刊號 1946년 1월, p.15.

37) Loc.cit.

38) 1924년 초, 동아일보는 사설 “민족적 경륜”을 발표했다. 이 사설은 수양동우회원이었고 안창호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춘원 이광수가 집필했다. 그는 우선 자치권만이라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이광수는 일본의 근대문명의 상위성(上位性)과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결국 그는 ‘일본의 주권 아래 법률이 금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치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39) 1926년 12월 16일부터 4회 동안 연재되었던 조선일보의 사설 “조선(朝鮮), 금후(今後)의 정치적 추세”에서는 동아일보의 소위 자치운동이 일본의 통치(統治)와 연락되고 호응이 되지 않고서는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40) 김명구,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기원 - 기독교사적 접근”, 2018년 5월 2일 해위민주주의연구원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참조.

41)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자.

1945년 9월 8일에 열린 한민당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된 5대 강령 중 세 번째 강령은 “근로계급의 복리를 증진할 사회정책의 실시”였다. 이 강령이 채택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가 송진우였다. 그는 전 민족의 균등한 발전을 주장했고, 그의 이러한 인식은 한민당의 경제 정강과 정책으로 나타났다.

광복 당시, 여운형계는 일본인과 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를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몰수한 토지는 국영(國營) 혹은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박헌영계는 일본인과 친일적 조선인, 반동지주의 소유 토지를 전부 몰수하고 국유로 한 다음,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sup>43)</sup> 안재홍계는 몰수대상을 일본인 소유의 토지로 한정하고, 분배방법에 있어서는 최저리로 국가에 장기상환하게 하는 유상분배를 채택했다.<sup>44)</sup>

한민당은 원칙상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국가가 경영해 자본의 절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토지는 대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자작농 정도로 할 것을 주장했다.<sup>45)</sup> 이를 구체화한 정책으로 ‘중공주의’(重工主義), ‘중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을 내걸었다. 근로계급의 사회복지를 주장하면서, 경제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아래, 토지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정책으로 “소작권 설정에 의한 국유제”<sup>46)</sup>를 제안했다. 소작료를 1/3로 제한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주들이 농지를 시장에 내놓게 되고 자연스럽게 땅값이 내려가게 된다는 시장경제원리를 생각했다. 그 내려간 땅값을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한 후,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렇게 되면 “농민은 대금으로 하여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수량을 납입해 소득권을 취득할 수 있다”<sup>47)</sup>며 토지 사유제를 표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주에게서도 산업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그들이 자연스럽게 상공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도 폈다. 토지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장 또는 공업 자재 등으로 환산해 주어 자연스럽게 산업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었다.<sup>48)</sup> 이렇게 해야 공정한 경제 정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민당의 토지개혁 방안은 지주제 일방적 몰락이나 전체주의적 평등주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공정(公正)을 이루고, 토지자본에 편중된 당시의 경제를

42) 1945년 11월에 발표된 조선인민당의 토지정책.

43) 1946년 9월 남조선 노동당 준비위원회가 채택한 강령 제 3항.

44) 정일준, “해방직후 분단국가형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해방직후 민족문제와 사회운동』(서울:문학과 지성사, 1988), pp.95-97 참조.

45) 함상훈, “我黨의 主義政策”, 『開關』, 제 8권 1호 (1946년 1월), p.52.

46) 송진우, “年頭所感”, 『先鋒』제2권, 1호, 1946년 1월.

47)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와 이념』(서울: 고대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p.12.

48) 한민당은 최소한도의 자금을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지 않고 소작료를 3분의 1의 제도로 묶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연히 토지를 방기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이 때 국가가 이것을 싸게 매입한 후, 값싸게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장 또는 공업 자재 등으로 환산해 주어 자연스럽게 공업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화하려 한 것이다. 곧 흥업구락부계의 내부에 마련된 경제사상, 곧 경제민주주의 의식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정강, 곧 “대자본, 대지주에 통제정책을 써서 근로계급의 생활을 보장”<sup>49)</sup>은 여기에서 발현된 것이다.

## 6. 여언

한민당에서 내건 민주주의의 이념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이었고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 기독교를 한 카테고리 안에서 인식했던 개화관료의 인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송진우는 해방공간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려 했다. 그때 그는 미국과 민주주의를 한 카테고리로 보았다. 그렇지만 그가 미국과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에는 전략적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1925년, 그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을 예견한 바 있다.

송진우의 강력한 반공 의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상적 대립 이외에도 공산주의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민립대학 참여의 과정, 자치론, 김윤식의 사회장, 연정회의 제안과정에서 그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목도했다. 그런 이유로 여운형과 반목하게 되었고, 반공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한민당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송진우와 한민당이 내세운 경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적이고 전략적 문제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월남 이상재, 장덕수, 조병옥 등의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한민당의 근로대중의 복지 정책과 토지정책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송진우가 민족개량과 실력양성을 주장했던, 곧 사회진화론의 철학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5년 이전, 그는 도산 안창호계가 주장했던 실력양성운동과 민족개량주의를 신봉했다. 도산 안창호계의 이광수를 동아일보사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런 이유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장덕수를 비롯한, YMCA 흥업구락부계에서 제창한 경제사상을 수용했다. 그리고 자기의 사상으로 각인시켰다.

본래, 경제 정의의 문제, 곧 경제민주주의의 문제는 동아일보계와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던 흥업구락부계에서 주창된 것이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이후의 신사조였고, 이 사상은 미국 신학계를 풍미했던 사회복음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든 인간과 모든 나라가 공평하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 펼쳐지는, 근대적 힘을 앞세우는 철학을 거부했다. 조병옥 등도 이를 주장했다.

한민당의 실제적 당수는 송진우였다. 한민당은 송진우, 김성수의 동아일보계와 신간회를 주도했던 조선일보계, 곧 흥업구락부의 연장선에 있던 기호계 기독교 민주주의 그룹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두 그

49) 함상훈, “我黨의 主義政策”, 『開關』, p.53.

룹은 영미식 민주주의에 대해 공유했으나 자치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다. 공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 사상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괴리가 있었다. 그런데 해방 정국에서 두 그룹은 합치했고 한민당을 탄생시켰다. 기호민족주의계 내부에서 서로 갈등했던 동아일보계와 흥업구락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념, 경제 사상을 공유하고 합치하게 된 것이다. 신간회 이후 흥업구락부계가 반공으로 돌아섰고,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계의 사회진화론의 정치철학을 버리고 경제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명구 :**

기독교 사학자이며, 2003년, 월남 이상재 연구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 감리교 목사이고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교수로 활동.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 『해위 윤보선-생애와 사상』, 『서울YMCA운동사 100-110』,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 『복음, 성령, 교회- 대한선교사들 연구』, 『해방공간과 기독교』 등 십여 편에 이름. 특히 2011년에 저술된 『해위 윤보선-생애와 사상』은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역사부분)에 선정되었고, 2013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The University of Edinburgh)은 그의 영어 논문 *Nationalism, Religion and Democracy* 을 책으로 출간하였음.